선거명	도봉구청장 선거				
후보자명	김동욱	기호	1	소속정당명	더불어민주당
공약순위 : 1	제목 : 창동 경제 엔진 프로젝트				

□ 목표

도봉을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일자리·소비·문화가 지역 안에서 순환하는 경제도시”로 전환하겠습니다. 서울아레나, GTX-C, 창동 민자역사,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농협 하나로마트 부지 개발 등 5대 핵심사업을 하나의 도시 패키지 전략으로 연결하여, 창동을 동북권 경제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 이행 방법

- 서울아레나·GTX-C·민자역사·복합환승센터·역세권 개발을 연계한 “창동 경제권” 구축
-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단계부터 도봉구가 적극 참여하여 공공기여 및 지역환원 구조 마련
- 서울아레나를 공연장이 아닌 관광·상권·숙박·일자리를 연결하는 경제 플랫폼으로 육성
- 공연 관람객 지역사랑상품권 연계 등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
- 창동역 일대를 “지나가는 환승역”이 아닌 “머무르는 경제 중심지”로 전환
- 청년·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확대 및 지역 우선채용 협약 추진

□ 이행 기간

- 2026년 : 창동 민자역사 준공 및 통합 추진체계 구축
- 2027년 : 서울아레나 개장 및 상권 연계사업 추진
- 2028년 : 농협 하나로마트 부지 복합개발 착공
- 2029년 : GTX-C 개통 연계 광역교통·상권 활성화
- 2030년 :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완성 및 동북권 경제거점 구축

□ 재원 조달 방안

- 서울아레나·민자역사 등 민간투자사업(BTO) 적극 활용
- GTX-C·환승센터 등 국·시비 확보 추진
- 개발사업 공공기여를 활용한 문화·돌봄·생활SOC 확충
- 관광·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및 세수 기반 확대

선거명	도봉구청장 선거				
후보자명	김동욱	기호	1	소속정당명	더불어민주당
공약순위 : 2	제목 : 도봉 공공부지 개발 정상화				

□ 목표

장기간 지연되거나 방향성을 잃은 공공부지 개발사업을 정상화하여, 도봉의 미래 성장동력과 주민 생활 기반을 동시에 확충하겠습니다.

화학부대 이전부지, 성대야구장 부지, 소방학교 부지, 서울시립도서관 건립 등 4대 핵심 공공부지를 연계 개발하여, 주거 중심 개발을 넘어 문화·체육·교육·상업·일자리가 결합된 도시 재편 전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이행 방법

- 화학부대 이전부지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통합 개발 추진
- 성대야구장 부지는 단순 주택공급이 아닌 방학역 역세권 경제거점으로 조성 추진
- 소방학교 부지는 공공주택·문화·체육·안전 기능이 결합된 생활형 복합거점으로 조성
- 지연된 서울시립도서관 건립을 정상화하여 동북권 대표 문화·교육거점으로 육성
- 주민설문·주민협의체·전문가 협의를 통한 주민참여형 개발체계 구축

□ 이행 기간

- 2026년 : 공공부지별 주민협의체 및 통합추진체계 구축
- 2027년 : 화학부대·성대야구장 개발 기본계획 및 서울시 협의 추진
- 2028년 : 소방학교 부지·서울시립도서관 사업 본격 착공 추진
- 2029년 : 방학역 역세권 복합개발 및 문화체육시설 조성 확대
- 2030년 : 공공부지 개발 완료 및 동북권 생활·문화 거점 조성

□ 재원 조달 방안

- 서울시·국비 지원사업 및 도시계획 공공기여 적극 활용
- 역세권 개발에 따른 용도지역 상향 및 민간 복합개발 연계 추진
- 문화체육시설·생활SOC는 기부채납 및 공공환원 방식 병행
- 공공주택·상업·문화 기능 결합을 통한 사업성 확보 및 재정 부담 최소화

선거명	도봉구청장 선거				
후보자명	김동욱	기호	1	소속정당명	더불어민주당
공약순위 : 3	제목 : 도봉 미래 교통과 주거 혁신 프로젝트				

□ 목표

GTX-C, 경원선 지하화, 우이-방학 경전철, 마들·상계 연계와 고도지구 완화·종상향을 통해 도봉의 단절된 도시 구조를 연결하고, 교통·주거·상권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형 도시로 재편하겠습니다.

철도 중심의 단절된 도시 구조를 개선하여, 도봉을 동북권 광역교통 중심지이자 미래 주거·생활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이행 방법

- GTX-C 조기 착공 및 준공 추진과 함께 경원선(1호선) 지하화 공동 추진
- 방학역·녹천역·도봉역 노후 역사 현대화 추진
- 우이-방학 경전철 조기 착공 및 마들·상계 연장 검토
- 역세권 중심 상권 활성화 및 철도 접근성 개선
- 고도지구 완화와 지구단위계획 종상향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추진
- 창동은 경제거점, 쌍문·방학은 주거·생활SOC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도시재편 추진

□ 이행 기간

- 2026년 : GTX-C 본공사 착공 및 우이-방학선 사업 추진 지원
- 2027년 : 경원선 지하화 국가계획 반영 및 역세권 종상향 확대
- 2028년 : GTX-C 개통 연계 창동 광역교통 중심지 조성
- 2029년 : 녹천·도봉역 현대화 예산 확보 및 상부개발 기본계획 수립
- 2030년 이후 : 경원선 단계별 지하화 및 미래 주거벨트 조성 추진

□ 재원 조달 방안

- GTX-C 및 광역철도 사업은 국비·서울시 예산 적극 확보
- 역세권 종상향 및 복합개발을 통한 민간투자 유치
- 고도지구 완화에 따른 개발이익 일부를 도로·공원·문화시설 등 기반시설로 환원
- 한국철도공사·서울시·국토교통부 협력을 통한 단계별 사업 추진

선거명	도봉구청장 선거				
후보자명	김동욱	기호	1	소속정당명	더불어민주당
공약순위 : 4	제목 : 도봉 스마트 동행 프로젝트				

□ 목표

AI·IoT 기반 스마트 돌봄과 사람 중심의 현장 복지를 결합하여, 도봉을 고독사·돌봄 공백·육아 불안 해소를 추진하는 생활복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어르신·저소득층·은둔가구·아이 키우는 가정·필수노동자까지, 사회적 약자를 먼저 찾아가고 함께 연결하는 “도봉형 통합 돌봄 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 이행 방법

- AI·IoT 기반 “도봉 스마트 돌봄 3.0” 구축
- 이상징후 감지 및 돌봄센터·119 연계 스마트 안부케어 시스템 운영
- “도봉 생활돌봄 매니저” 방문서비스 확대 및 24시간 긴급 돌봄체계 구축
- 동주민센터 중심 생활권 통합돌봄 체계 및 돌봄 코디네이터 운영
- 고독사 위험군·은둔형 청년·고립 중장년 대상 선제 발굴 시스템 구축
- “도봉 복지 파수꾼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사회 기반 인적 안전망 강화
- 야간보육·역세권 임시보육·출산동행 서비스 등 육아 안전도시 추진
- 필수노동자 건강검진·심리상담·휴게시설 개선 및 안전물품 지원 확대
- 돌봄 데이터 기반 “도봉 돌봄지도(DB)” 구축 및 선제적 행정 대응 강화

□ 이행 기간

- 2026년 : 스마트 돌봄 통합플랫폼 및 선제발굴 시스템 구축
- 2027년 : 생활돌봄 매니저·복지 파수꾼·야간보육 확대 운영
- 2028년 : 스마트 돌봄주택 및 통합 건강관리 체계 시범 운영
- 2029년 : AI 기반 돌봄·복지·건강 데이터 통합관리 고도화
- 2030년 : 스마트 통합돌봄 도시 체계 구축 추진

□ 재원 조달 방안

-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스마트돌봄 및 통합돌봄 국비사업 적극 확보
- 서울시 복지·돌봄·저출생 대응 예산 연계 확대
- 기존 복지사업 통합·조정을 통한 예산 효율화 추진
- 민간 복지기관·의료기관·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 단계별 확대 운영을 통한 재정 부담 최소화 및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마련

선거명	도봉구청장 선거				
후보자명	김동욱	기호	1	소속정당명	더불어민주당
공약순위 : 5	제목 : 결정권을 주민에게 - 도봉 주민주권 프로젝트				

□ 목표

행정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주민이 통보받는 도시가 아니라,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주민주권 도시 도봉을 만들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공공부지 개발·생활SOC·예산·교통 문제까지 주민 의견이 실제 정책과 행정에 반영되는 참여형 행정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이행 방법

- 주요 개발사업별 주민협의체 및 주민설명회 의무화 추진
- 주민참여예산 확대 및 생활밀착형 주민제안제 활성화
- 재개발·재건축 갈등조정 주민협의 플랫폼 구축
- 온라인 주민투표·주민설문 시스템 확대 운영
- 동별 주민총회 및 생활권 의제 발굴 체계 구축
- 구청장 주민소통회의 및 직통 민원체계 정례화
- 공공갈등 사전조정 시스템 구축 및 주민 숙의 절차 강화
- 주민감시·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투명행정 추진

□ 이행 기간

- 2026년 : 주민참여 플랫폼 및 주민협의체 운영체계 구축
- 2027년 : 주민참여예산 및 온라인 주민투표 확대 운영
- 2028년 : 개발사업 주민숙의제 시범 운영
- 2029년 : 생활권 주민총회 및 갈등조정체계 확대
- 2030년 : 주민참여형 지방행정 체계 정착 추진

□ 재원 조달 방안

- 행정안전부 주민자치·주민참여 예산사업 적극 활용
- 디지털 행정체계 구축을 통한 운영 효율화 추진
- 기존 주민자치·마을공동체 사업 연계 운영
-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갈등비용 감소 및 행정 효율성 강화